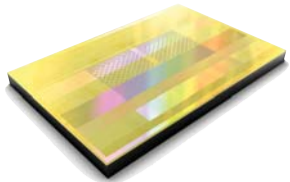




코스피	2487.91 (-11.84)	코스닥	852.51 (+17.60)
금리(미국 3년)	2.15 (-0.02)	환율(원/달러)	1072.00 (+0.10) (11월)



**[종합]**  
삼성전자  
영화 61편, 단 1초에 처리  
2세대 D램 최초 양산  
08

### 일확천금 꿈꾸는 청년... 대한민국 미래가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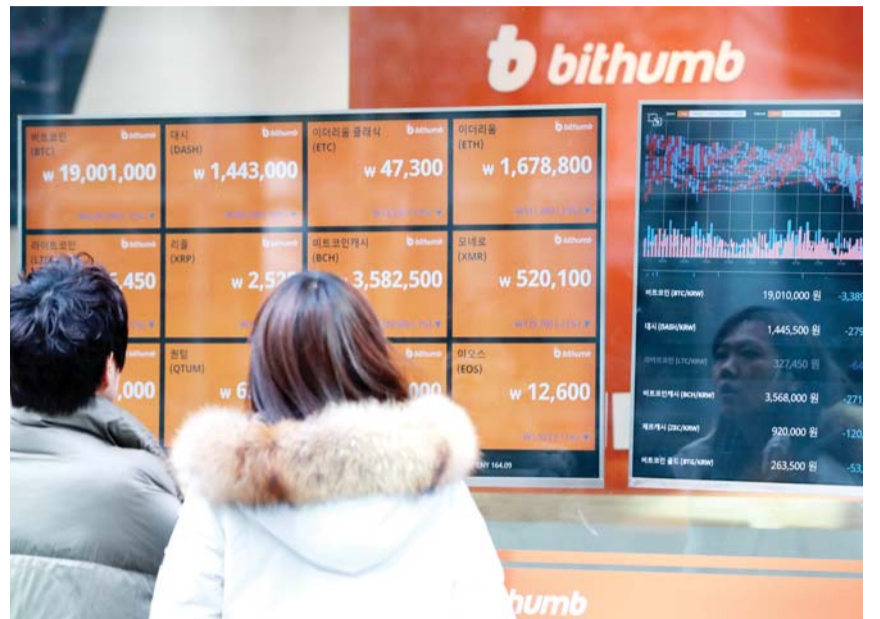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상화폐 열풍에 휩싸이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 가상화폐는 투기이고 막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 시각이지만 청년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가하는 '수탈'에서 벗어날 유일한 출구가 가상화폐라는 주장이다. **<관련 시리즈 6면>** (편집자 주)

# 1 결혼? 주택? 꿈도 못 꺾요 유일한 탈출구는 가상화폐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취직에 성공했는데 연봉은 24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이것 저것 선공제하고 제 손에 떨어지는 건 월 190만원도 안되더라고요. 거기서 집세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돈이 없어요. 정부는 결혼하고 집도 사라고 하지만 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정부가 청년들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지난해 초 디자인 업종 취업에 성공한 정민석(가명·28)씨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11월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정씨는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인식은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 덕에 소액을 투자해 목돈을 벌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았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대학생 박지현(가명·26)씨도 비슷했다. 그는 “서

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라 가정할 때 월 200만~300만원을 버는 일반 회사원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후식 급감위장장도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 들었다. 출발점이 달랐던 기성세대는 부동산,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세우기 어려운 가상화폐 시장이야말로 청년층이 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표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주장이다.  
대학에서 부동산을 전공한다는 그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막자 자금

이 홍콩으로 몰렸다. 글로벌 시장은 넓다”며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2 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니트족' 30만명 넘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NEET)족' 청년이 지난해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니트족(NEET)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뜻한다.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분해 흔히 무업자(無業者)라고도 칭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0만1000명으로 2016년의 27만



3000명 보다 2만8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9%였으며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3'은 청년층이 22.7%로 2016년보다 0.7%p 높았다.

전체 청년층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2.9%에서 2017년 3.2%로 0.3%p 높아졌다.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비경제활동 사유는 진학준비, 육아, 가사, 교육기관 통학, 연로, 심신장애, 입대 대기, 쉬었음 등으로 분류된다.

장차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작·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유도 있지만 '쉬었음'은 이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최신기자 grandtrust@)

## 3 '이직' 아닌 '전직' 꿈꾼다

청년들이 구직난 속에서도 자아실현을 이유로 퇴사를 꿈꾸고 있다. 불합리한 사내문화, 이상과 현실의 괴리 등 주관적 만족도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프리랜서 3년차인 양모(29·여) 씨는 “오르지 않는 연봉에 원치 않는 야근, 적은 인센티브, 개인 시간마저 없는 직장 생활을 하느니 고용불안에 시달리더라도 내 시간 쓸 수 있는 이 생활이 더 좋다”고 말했다.

인론사에서 일하는 강모(27·여)씨도 안정된 직장을 벗어나고픈 마음이 굴뚝 같다. 강씨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적도 아니다. 게임 하면서 노는 상사 밑에서 고생하는 현실이 싫다”며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의 막말과 잘못된 언행,

성희롱과 유머를 구분 못하는 태도 역시 회사 밖을 내다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이들의 직장 탈출 욕구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6개 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 25.2%보다 2.5%p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017년 10월호를 통해 '남녀 모두 자신의 교육수준 대비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이직 확률이 줄어 들었고, 남성은 인간관계에 불만족수록 확률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 파리바게뜨 고용 협상 타결

### 자회사 고용안 수용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11일 오후 5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 한 후 합의서에 날인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생연맹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3개월여 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가맹본부가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 노동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 없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고,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0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u7854@

## 자본잠식 기업도 코스닥 상장... 문턱 확 낮춘다

### 정부, 코스닥 활성화 방안 세금 혜택·금융지원 강화 개인투자자 10% 소득공제

앞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도 기술만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벤처기업투자자신탁'을 활성화하고, 연금금이 상장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혁신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 진입문턱을 확 낮춘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3면>

###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코스닥 상장요건 전면 개편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제고 코스닥 시장 건전성·신뢰성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투자정보 확충 및 상장유지비용 절감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 제고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 규율 강화 불공정 거래 근절

지난 5일 기준 코스닥지수는 839포인트로 1996년 출범 당시(1000포인트)보다 16% 낮은 수준으로, 모험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크게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

장 활성화에 나선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코스닥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 스타트업이나 초기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은 자본금 변동이 크고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에서 코스닥 시장 IPO(기업공개)까지 평균 12.9년이나 소요된다.  
혁신 기업의 활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정부는 '계속사업이익

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카드도 꺼냈다.

개인투자자에겐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벤처기업투자자신탁'을 활성화한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연금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